

전문가회의 자료집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2014. 12. 15.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전문가회의 자료집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2014. 12. 15.

전문가회의 일정

1.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13:00 - 17:00

2. 장 소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세미나실

3. 내 용

○ 진 행 :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사 회 : 이형규 교수 (한양대 법전원)

○ 제안 및 토론

권재열 교수 (경희대 법전원), 권종호 교수 (건국대 법전원), 김상규 교수 (한양대 법전원), 김선정 교수 (동국대 법대), 김성천 연구위원 (소비자원), 김유석 탐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박효근 교수 (대구대 법대), 송호신 교수 (교통대), 유주선 교수 (강남대), 위계찬 교수 (한양대 법전원), 이부하 교수 (영남대 법전원), 이웅영 연구원 (정법대), 이천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희성 교수 (원광대 법전원), 정문식 교수 (한양대 법전원), 정성숙 교수 (영산대), 정준우 교수 (인하대 법전원), 조경희 입법조사관 (국회도서관), 최승필 교수 (한국외대), 황현영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 진행방법

- 추천과제 주제 연구계획서를 참가자 1인당 1-2개씩 제출받음
- 실 참가자들간 전문가회의에서, 집중토론·점검·보완.

목 차

1.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7
2.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	11
3. 보험대리점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6
4. 자동차보험 대차료시장 진입규제에 관한 연구	21
5. 비트코인(Bitcoin) 법제정비방안 연구	26
6.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30
7.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35
8.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관련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38
9.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42
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46
11. 주택저당증권의 현실과 MBS법제의 개선	50
12. 해상운송 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한 해상법제의 개선	54
13.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논의	57
14.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채권담보의 운영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1
15.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시 심사기준의 합리성 연구	65
16. 생협 의료공제사업 관련 법제연구	69
17.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 연구	73
18. 남북한 통일과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 연구	76
19. 입찰참가 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79
20. 지속발전이 가능한 재정기초를 위한 헌법개정 연구 - 국가부채제한의 헌법도입을 위한 유럽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	83

21. 스쿼즈아웃 법제 개선방안 연구	87
22. 대재해위험의 담보와 대재해채권(CAT-Bond)의 법제도화 연구	91
23. 해상운송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96
24.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100
25. 비과세제도를 이용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방안 연구	104
26. 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제문제의 법적검토	108
27.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검토	113
28. 어음만기제한에 관한 연구	117

■ 연구과제명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집단소송법은 2004년 1월 20일 공포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유일하며 (법률 제7074호), 이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이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의 우려하고는 달리 남소 보다는 오히려 사문화 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집단소송법의 대상영역의 확대여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집단소송이라 함은 회사나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일부가 다른 피해자를 대표해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제기하고 그 결과는 집단전체가 향유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함
- 집단소송은 개별적으로는 피해규모가 작아서 피해자 각자의 제소의 동기는 미약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서만 인정되며,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 등 증권거래에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9. 4. 13. 모 업체가 통화옵션거래 상품 키코(KIKO)의 손실을 감추고 실적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첫 집단소송 전개하였지만, 2005년 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6건의 소 제기, 이 중 단 1건만이 화해로 종결되었고, 1건은 소송불허가결정, 2건은 2013년 9월에서야 허가결정을 받았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안을 다뤄본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일각에서 제기됐던 남소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집단소송법의 현재 좌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의 동양 사태와 같은 유형의 증권 및 금융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시세조종행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한 적절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 상황임
-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면서도 정당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산업화·민주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집단분쟁이 빈발하고, 이를 해결할 효율적인 소송제도 절실함
- 집단소송제는 고비용·저효율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임
- 증권시장에서의 신뢰확보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형성하지만 기존 증권규제관련기관의 역할만으로는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증권관련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우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증권범죄로 인한 이익동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한다면 국내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확보는 물론이고 우리 증권시장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해외투자자들의 유치 및 국가신용도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임
- 이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2008)	• 문헌조사연구	•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의 비교연구
	2	•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개정론(2014)	• 문헌연구 • 현상분석	• 변호사의 입장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의 개정론 피력

본 연구	• 증권집단소송법의 활성화 차원에서 비교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균형잡힌 개선안을 도출함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집단소송의 성격분석 • 외국사례연구 • 단순히 증권집단소송법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도출함
------	---	--------------------	---

■ 주요 연구내용

- 증권집단소송법의 사문화 현상의 이유 파악
- 집단소송법제 연구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분석
 - 미국의 동향
 - EU국가의 동향
- 목차 (예시)

I. 서론
II. 집단소송법제 연구의 세계적 동향에 대한 분석
III. 각국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의 입법례 및 판례 분석
- 미국
- 캐나다
- EU
- 독일
- 오스트리아
- 호주
- 네덜란드
IV.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의 문제점
V.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29	소비자 권익보호
2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1-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3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4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5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의 최근 입법례의 분석
 - 증권집단소송법제의 좌표 확인
 - 증권집단소송이 활성화되기 위한 현행 법제의 분석 및 법제개선방향 검토자료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인지, 공정거래위원회 내지 규제기관의 공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기존의 공적 집행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급사업자 보호의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하도급 거래는 특히 건설, 자동차 산업 등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하도급 거래는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에까지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하도급 거래의 원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내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은 거래상 지위가 약한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원사업자부터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 수리, 시공 등을 수행하여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대금의 결정 또는 대금 지급의 지체가 발생할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큼
-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하여 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품 단가의 일률적 인하 내지 기만에 의한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부당한 대금 감액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안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면서 하도급법상의 제재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이 일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수급사업자의 이러한 피해가 빈발함에도 적절하게 수급사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도급 관련 법령 자체가 충분한 이론적 고려없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체계상의 여러 허점이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원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예방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상생하여야만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특히 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

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하도급 계약은 기본적인 사적 계약이므로 민사적인 판단 기준을 조화시키는 법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의 이론과 민사법상의 도급계약, 손해배상 이론 등 법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연구 목적

-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가는 조항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내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하도급에 적용시키는 경우에 하도급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에 근거한 실질적인 관계정립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함
- 최근에는 아웃소싱 등 전문화 분업화의 추세에 많은 부분에서 하도급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도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금결정 내지 지급과 관련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기준의 마련 내지 기존 기준의 새로운 해석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함
- 아울러 하도급법은 제25조에서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규정과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정조치의 성격과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혀야 할 것임
- 이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반행위와 제재수단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한 제재수단의 체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불공정하도급규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2009)	• 문헌조사연구	• 하도급법의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 제시
	2	• 하도급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7)	• 문헌연구 • 현상분석	• 하도급거래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 제시

<p>본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현실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이론을 하도급에 적용시켜 위법성 판단기준을 체계화한 본격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실태조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소송의 성격분석 • 외국사례연구 • 공정거래법 상의 방해남용과 착취남용의 구분에 의한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요소의 차이를 하도급법의 적용가능한지 검토
--------------------	--	--	---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하도급법 체계와 하도급 유형별 수급사업자 피해 사례분석
-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등 위법행위에 관한 판단기준 검토
-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분쟁해결 제도 검토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수급사업자 보호 관련 입법례 검토
 - 미국의 입법례
 - 일본의 입법례
 - 독일의 입법례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의 관계 정립
- 하도급 법상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및 제재와 수급사업자의 민사적 구제방안과의 관계 설정
- 목차 (예시)

<p>I. 서론</p> <p>II. 하도급법의 체계와 하도급 유형별 수급사업자 피해 사례분석</p> <p>III.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등 위법행위에 관한 판단기준 검토</p> <p>IV.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분쟁해결 제도 검토</p> <p>V.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수급사업자 실효성 제고 관련 외국의입법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독일 - 일본 <p>VI.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과의 관계 정립</p> <p>VII. 하도급 법상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및 제재와 수급사업자의 민사적 구제방안과의 관계 설정</p> <p>VIII. 결론</p>
--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관련 사례 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2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1-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3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4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9	소비자 권익보호
5	1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6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하도급이라는 계약은 기존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이론으로 해결하여 야 하지만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공정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공정한 사업자간의 관계정립을 통한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

- 본 과제는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분석하여 다른 법령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본 과제의 결과물은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이 법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체계정립에도 기여할 것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하도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정책을 집행하거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적발을 할 때에도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보험대리점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3. 12. 시행될 상법 제4편에서 보험대리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임. 상법 제642조의2 시행에 따라 야기될 모집을 위탁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매우 과다할 것으로 보여 이를 감경하고, 사실상 독립적 영업활동의 주체인 계약대리점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제10조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것 역시 정책적 결단의 문제임. 만일 소정의 개정이 실현된다면 보험대리점은 배상책임을 이행할 자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개발·도입이라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4. 2. 20. 상법 제4편 보험의 개정에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제646조의2)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거래실무상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업법 제102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업법 제102조 수정론 중의 하나는 배상책임주체를 “위탁보험자”에서 위탁보험자인 경우와 계약대리점인 경우로 나누자는 것으로 이럴 경우 계약대리점의 배상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일부 GA를 제외한 상당수 계약보험대리점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배상책임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도 예상됨. 이는 결과적으로 대리점에게 계약체결관련 다양한 권한을 부여한 개정상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손해배상을 통한 계약자 보호는 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함.
- 그러므로 현행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제도 외에 특단의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험대리점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함.
- 이상과 같은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 설정을 좀 더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연구 목적

- 2015. 3. 12. 시행을 앞둔 상법 제4편 개정법률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제646조의2)조항에 따라 야기될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업법 제102에 따라 부여될 것으로, 보험사업자들은 업법 제102조를 개정하여 계약체결의 주체인 계약대리점의 자기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며 그러한 방향의 법개정이 옳다고 생각함.

- 그와 같은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지는 배상책임은 계약 대리점이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거래실태로 볼때 계약재리점에 의한 보험 계약은 수많은 계약자 피해사례를 양산할 것이 우려됨.
- 그러므로 계약대리점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업개설을 위한 보증금 등 형식적인 방법 외에 실질적인 변제자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GA와 기타 중소형대리점의 변제력은 큰 차이가 있으며, GA라 하더라도 파산 후 재 설립이라는 악순환으로 책임을 회피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이행배상책임의 확보방법으로 보험대리점 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업법 제102조에 대한 선행연구는 약간 존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조달을 위해 보험 모집인과 보험계약자 간 맺은 사적 투자계약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2014. 10.)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에 대한 평석임	-보험모집인이 일탈적 모집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에 대한 구제책임의 이행주체를 다른 판결에 대한 평석이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
	3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외형이론”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2007)	-문헌연구	이 연구 역시 일종의 판례평석으로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를 전제로 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의 어떤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한 보험자가 책임지는지에 관한 연구이며, 법대정문이나 배상책임자력확보에 관한 연구가 아님

<p>본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업계가 자주 문제를 제기한 업법 제102조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법개정안으로 구체화시킬 예정 • 이에 따라 배상자력의 확보가 시급한 현안이 될 것이므로 현행 업법 아래서의 변제자력 이행의 불충분성을 확인 • 배상책임보험도입은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따른 계약대리점의 영업비용 증가 등 반발도 예상됨. • 보험사업자, 계약대리점,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실현할 모형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보험소비자, 보험자, 대리점, 금융위 등 정책담당자, 금감원 등 정책담당자, 상법개정과 연관될 경우 법무부 상사법무과, 상품개발시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수시면담 • 필요시 학회 등과 협의하여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상법에 따른 소비자불만증가 예측 • 보험업법 제10조 개정론 조사 • 외국의 실행사례, 특히 일본의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 • 우리나라에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한 모형을 약관방식으로 제안
--------------------	--	--	---

▣ 주요 연구내용

- 2015. 3. 12. 상법 제646조의2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예견
- 보험업법 제102조 개정론의 제시
 - 미국 뉴욕주보험법
 - 독일 보험감독법
 - 일본 보험업법 등을 검토
- 업법 제102조 개정에 따라 계약대리점의 배상책임 증가에 따르는 가능한 대안들 검토
- 일본의 대리점배상책임제도의 내용과 실행방법, 효과 등을 정밀하게 분석
- 우리나라에의 도입필요성, 도입가능성, 도입시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
- 목차 (예시)

<p>I. 서론</p> <p>II. 외국사례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주 보험법 - 독일 보험감독법 - 일본 보험업법 <p>III.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에 대한 검토와 개정방향</p> <p>IV. 모집위탁 보험자와 계약대리점 간 책임분배구조</p> <p>V.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현행 법제의 분석</p>

- VI. 대체적 또는 보완적 방안으로서의 배상책임보험제도
 - 배상책임보험 일반과 현황
 - 배상책임보험모형과 대리점배상책임보험제도의 특성
 - 상품개발시 유의사항
 - 강제보험 여부 등 실효성 확보 방안
- VII. 결론

■ 연구추진방법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법령 조사

- 상법 제646조의2 도입에 따라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소비자 피해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
- 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02조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제기된 개정의견을 취합하여 법 개정안 제시
-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대리점이 배상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영업보증금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
- 법개정안 제시

비교법제연구

- 외국의 경우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
- 미국의 뉴욕주 보험법, 독일의 보험감독법 등을 조사
- 일본 보험업법상 규정의 유무를 조사하고 대리점배상책임보험 도입사례, 실무모형과 도입 효과 등을 조사하면 상당히 유효한 도입모형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보험사 상품개발담당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대리점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장향, 책임모델과 보험상품개발을 모색
- 관련 전문가, 현업 종사자 수시 면담을 통해 여누완성도를 높임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보험개발원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29	소비자권익보호
2	2	2.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2-2-57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현재 보험업법에 존재하는 위탁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조항을 보험계약법인 상법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개정방향을 정리
- 보험자책임과 보험대리점책임의 양분화에 따른 변제자력확보를 위한 보험업법상 제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보완 내지 대체작 방안을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보험대리점책임보험제도를 개발 도입하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제안하고, 보험개발원이나 손해보험협회 등이 개발모형을 제시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영업개설보증금 제도를 대치하도록 건의.
- 보험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자동차보험 대차료시장 진입규제에 관한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른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합의 및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구체적 업종선정에 있어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진전됨. • 자동차대여사업이 신고제로 전화되며 규제로 인한 불만은 해소되었으나 지나친 과당 경쟁으로 영세업체가 난립하기에 이룸. • 이에 따라 수지가 악화된 렌트카 회사들은 중소기업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집단민원 •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전상정을 미루고 있으나 중소대차사업자들은 최소한 자동차보험 대차료나 수리비 시장에서의 대기업참여 제한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대중소기업간 문제일뿐 아니라 2000만명에 이르는 자동차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제여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수리비 및 대차료는 특약형태로 담보되고 있음.
- 최근 1억원대에 달하는 대차료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한 사건과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서 대차료시장의 혼란한 거래 상황이 노출됨.
- 1천여개 렌트카회사가 난립중인 대차시장에서 4대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과도한 상태이며 이에 중소형사들은 대기업계열사의 대차시장 철수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대차료를 지급받는 자동차보험대차시장에서는 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들과 대형렌트카회사들은 중소형사의 과도한 요금체계는 결국 전체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펴고 있어 갈등 격화.
- 자동차보유대수가 2천만대에 육박하여 자동차보험이 필수수단이 되고 보험료가 준조세적 부담으로까지 인식되는 현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리비 및 대차료제도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

■ 연구 목적

- 자동차보험 대차료대차시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이들이 보험사업자- 보험소비자-자동차 사고 피해자- 대차회사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파악
- 현행 대차료대차시장의 4대기업 시장점유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
- 합리적인 대차료 확보를 위하여 대기업의 진입규제나 퇴출,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 등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손해인정기준에 대한 소고”, 『법률신문』 (2014.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치게 보험사업자 입장에서 접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이익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법조』 제567호 (법조협회,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차료지급책임에 대하여 부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거래현실과 다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적 사용가능성(abstrakte Gebrauchsmöglichkeit)의 상실에 대한 배상”, 『재판자료 : 외국사법연수논집(19)』 (법원행정처,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독일의 판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와 민사법상 손해배상의 원칙형에 차이가 있음.
	4	<p>“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의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법원도서관, 2013(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례평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석의 성격상 폭넓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곤란함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서의 논의 및 제도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대차료대차시장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 최근 증가하는 관련관결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 특히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지정여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함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내용 및 상법상 책임보험의 법리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 필요하다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자료인상은 전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로 독일과 일본이 주된 대상국임 이해관계자가 많고 참여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어서 공론화고장이 필요함,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공정한 기관과 협의하에 공청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사 손해배상법 구조 상법상 배상책임보험구조 표준약관의 특약내용의 합리성 검토 외국사례연구 구체적 정책방향의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대차료의 의미 및 구조
 - 표준약관의 해당조항 분석
 - 최근 판결에 나타난 “동종차종” 등의 문제점
 - 대차료시장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의 당부
- 외국의 입법례 및 관련 판결의 분석
 - 독일에서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대차료 규제방식과 판결의 추이
 - 일본에서의 규제방식과 판결과 추이
 - 미국에서의 규제여부와 내용
- 소비자 후생관점에서의 대차료시장진입규제의 타당성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약상 관련조항의 개선방향
 - 대차료 폐지론의 당부
 - 대차료배상의 민사법적 근거와 현물급부의 가능성
 - 민법상 손해경감의무 또는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 진입규제에 대한 결론
- 목차

- I. 문제의 제기
- II. 대차료시장의 현황
- III. 시장진입규제 요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IV. 대차료책임의 민사법적 구조
 - 1.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 2. 현물급부의 가능성
 - 3. 가정대차료의 정당성
- V. 외국 사례의 검토
 - 1. 독일
 - 2. 미국
 - 3. 일본
- VI. 우리나라 민사책임의 구조와 보험자책임의 구조
 - 1. 학설의 분석
 - 2. 관련 판결의 분석
- VII. 결론 : 중소기업고유업종지정을 통한 대기업퇴출의 정당성 여부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각 손해보험사, 손해보험협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렌트카회사, 정비업소 및 견인업체, 보험계약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아 이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필요시 학회 또는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론화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과), 금융위원회(보험정책), 금융감독원(표준약관제정, 개별약관 인가), 보험개발원(표준대차료작성), 손보협회(사업자단체),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고유업종 협의 기관), 소비자원(보험소비자보호)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29	소비자 권익 보호
2	2	3.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지원	2-3-57	서민 금융부담 완화
3	1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인채 외국사례를 모방한 약관에 의하여 시행된 대차료특약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
- 대차료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성격 및 보험자책임의 근거를 법리적으로 검토
- 대차료규제의 근거로서 민법상 학설로 인정되는 손해경감의무,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유추적용 가부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
- 4대 렌트카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협의할 대상이 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

- 대물급부, 가정대차료의 법리를 모색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대차료 시장에서 대형회사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상, 소비자 후생상 가능하며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 유관기관에 제시.
 - 자동차보험정책(국토교통부), 금융소비자보호(금융위원회), 대기업규제 및 공정거래(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제정 및 개별약관 인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정책수립및 제도개선에 자료로 제시
- 기타 기대효과
 - 대차시차에서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법 확보
 -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배상능력확보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중소기업고유업종 합의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약관개선방향을 제안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비트코인(Bitcoin) 법제정비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디지털통화의 대명사로 부상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함. 미국,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각국이 독자적인 대응을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2014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각국의 동향을 감안해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체계 정리를 위한 입법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가상화폐로 등장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논의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재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함.
- 비트코인을 둘러싼 법률문제는 민법(계약, 소비자법, 프라이버시보호), 형법(자금세탁, 사기), 세법(소득세, 부가가치세), 금융법(은행, 지급결제, 증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해야 함.
-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논의 및 법제 정비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외적으로 알맞은 비트코인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연구를 통해 세부적으로 비트코인 규제에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비트코인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새로운 화폐로 등장한 비트코인을 국내외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법적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 거래 체계의 법적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기재부 등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규제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입법론적 논쟁이 있는 경우, 비트코인을 둘러싼 법제의 현황 및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알맞은 비트코인 법제의 정비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비트코인을 둘러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구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향 및 방안이 제시되어 비트코인 거래의 적정화 및 공정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 비트코인을 둘러싼 최근 논쟁을 검토함	-문헌연구	-비트코인의 특징 -위기 및 논란, 그리고 시사점
	2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 사점(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13)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법 적 기반 마련 등 시사점 검토	-문헌연구 -현황 분석	-가상화폐 이용현황 -가상화폐 관련 시사점
	3	비트코인의 현황과 시사점(한 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2013)	-문헌연구	-비트코인의 개념 및 현황 -주요 제약점 -해외논의 및 대응사례
	4	Regulation of Bitcoin in Se- lected Jurisdictions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Center, 2014) -40개국가의 관할권 분석	-문헌연구 -비교법 연구	-40개 국가의 관할권 분석
	5	Bitcoin : Market, economics and regulation (EPRS Briefing, 2014)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 경 제학은 물론 규제의 현황을 검토	-문헌연구	-비트코인의 개념과 특징 -비트코인의 규제 현황
	6	Bitcoin and the law : An analytical report on Bitcoin's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in Canada (Bitcoin Foundation Canada Policy report No. 1 July 2014)	-문헌연구 -법제연구	-사법, 형법, 세법, 금융법 등 캐나다의 비트코인 관련 법 제의 검토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트코인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련 법제의 현 황 및 정비방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법 연구 • 법제 연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분석 • 외국 논의 연구 • 민법, 소비자법, 상법, 금융 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 률들의 현황 및 개선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 외국 논의의 연구
 - 미국의 논의
 - 캐나다의 논의
 - 유럽연합의 논의
 - 독일의 논의
 - 일본의 논의
- 목차 (예시)

- I. 서론
- II. 비트코인 법리적 고찰
 -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 비트코인거래의 법적 성격
- III. 비트코인 관련 국내법제 검토
 - 금융법
 - 상법
 - 공정거래법
 - 민법
 - 소비자법
- IV. 비트코인 비교법적 고찰
 - 미국
 - 캐나다
 - 유럽연합
 - 독일
 - 일본
- V. 비트코인의 정착을 위한 법제정비방향
-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창조생태계 조성	1	기업지배구조 개선
2	1	창조생태계 조성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3	1	창조생태계 조성	7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4	1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6	1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6	1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법제연구가 부족한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분석
 - 비트코인의 정착 및 정상화되기 위한 상사법 및 금융법적 검토 및 법제개선방향 검토자료 제공
 - 비트코인 입법시 선진국의 논의 동향 등 분석자료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정부의 기업규제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행동경제학은 정부의 기업규제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의 창의성과 개방성을 제한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는 규제방식 개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규제의 행동경제학 접근을 확산하고 있음.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국정운영키워드를 하고 있는 현 정부가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다양한 주요 법률들과의 적용과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정책마련 및 법제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의사결정에 나타난 비합리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불완전성의 보완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미국, 호주 등은 물론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정부규제 특히 기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음.
- 정부는 선택설계자로서 국민은 물론 기업들이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여 작위/부작위 명령, 금전적 징벌/유인 등 전통적 규제방식 보다는 정보제공, 선택구조 변경 등의 정책수단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기업지배구조,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환경, 보건, 에너지 등의 법제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수단의 개발이 필요함.
-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정부 각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마련 및 법제 정비의 동향은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는 현정부의 기업규제를 위한 법제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대안임.
- 모든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가 실효성있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함.

■ 연구 목적

- 미국, 호주, OECD 등은 정부가 선택설계자로서 국민은 물론 기업들이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여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정부 각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마련 및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전자상거래, 환경, 보건, 에너지 등의 법제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수단의 개발이 필요함.

- 행동경제적 접근의 기업규제정책 및 법제정비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p>행동경제학의 논거가 소비자정책에 주는 시사점(소비자정책동향 제4호2008.6.20)</p> <p>-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소비자정책과 교육정책의 시사점을 검토함.</p>	<p>- 문헌연구</p> <p>- 정책연구</p>	<p>-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수요측면의 시장 실패</p> <p>- 소비자편향과 관련된 수요측면의 시장 분석 사례</p> <p>- 소비자정책에의 시사점</p>
	2	<p>효과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행동경제학적 선택설계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12)</p> <p>-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갈등관리 정책 방안 검토</p>	<p>- 문헌연구</p> <p>- 사례분석</p> <p>- 인식조사</p>	<p>- 행동경제학과 갈등관리에 적용가능성</p> <p>- 공공갈등관리 사례 분석</p> <p>- 갈등해결의 행동주의적 변인 분석</p>
	3	<p>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녹색소비정책의 효과성 증대 방안(한국환경산업기술원, special issues 2014)</p> <p>-녹색소비정책의 행동경제학적 검토</p>	<p>- 문헌연구</p>	<p>- 휴리스틱을 활용한 방법</p> <p>- 프로스펙트 이론을 활용한 방법</p>
	4	<p>소비자행동 관련 분야의 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의 연구동향 고찰(소비자학연구 제 21권 제2호)</p> <p>-행동론적 의사결정이론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검토</p>	<p>- 문헌연구</p>	<p>- 행동론적 의사결정 이론의 발전과정</p>
	5	<p>BEHAVIORAL LAW AND ECONOMICS: ITS ORIGINS, FATAL FLAWS, AND IMPLICATIONS FOR LIBERTY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6, No. 3)</p> <p>-행동법경제학의 기원, 단점 그리고 의의를 연구</p>	<p>- 문헌연구</p>	<p>- 행동경제학의 역사</p> <p>- 행동경제학에서 행동법경제학으로의 전환</p>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6	<p>THE OXFORD HANDBOOK OF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LAW (Edited by EYAL ZAMIR and ORON TEICHM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4)</p> <p>-계약법, 불법행위법, 소비자계약법, 재산법, 보험법, 기업법, 형법, 경쟁법, 소송법 등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법적 논점을 검토함.</p>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경제학 개관 - 행동경제학과 법과의 관계성 및 특수성 -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법 적용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규제정책 및 법제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법 연구 • 입법 연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경제학과 정부규제의 연계 • 외국 입법례 연구 •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기업법제의 적용과 한계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기업규제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분석
- 외국 사례의 연구
 -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 OECE

○ 목차 (예시)

I. 서론
II. 행동경제학과 기업규제의 관계
- 행동경제학의 의의
-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의 패러다임
III. 기업규제 국내법제의 현황과 평가
- 국내법제의 현황
- 행동경제학적 평가
IV. 행동경제학과 기업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
- 호주
- OECD
V.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법제의 정비방향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미래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2	1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	1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4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9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6	4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105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6	5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126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연구가 부족하였던 행동경제학 기업규제에 대한 법제적 분석
 -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가 조속히 정착 및 정상화되기 위한 기업규제법제 분석 및 법제정 비방향 검토자료 제공
 - 행동경제학적 기업규제법제의 입법에 필요한 분석자료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2009.2.3.이후 개별법상 사모펀드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미진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규제 차이로 인하여 법률 적용의 적정성 및 투자자보호의 규제차익을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외국의 경우 사모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규제 등에 대하여 법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공모펀드에 대비하여 법체계 내에서 규율하도록 법제 화함에 따라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운용규제, 감독규제 등에 있어서 공모펀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율체계를 지니게 되었음
-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와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의 적용범위를 일괄정리 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각 정부부처의 산업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도입 된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법제화가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시장법과의 규제의 차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
- 동일한 투자대상(예 : 부동산)에 대하여 정부부처별로 별도의 사모펀드 제도를 이용한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각 제도의 근거법령의 차이로 인한 투자자와 시장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 하여 동일한 행위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사모펀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 연구 목적

- 사모펀드의 관할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함으로써, 사모펀드 투자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운용규제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안의 마련을 요함
-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 투자의 기본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모펀드 관련 개별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의 투자행위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대한 자리매김이 요구됨.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사모펀드 규제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사모펀드의 투자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2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상 사모펀드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규제체계의 비교 및 규제내용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의 성격분석 • 외국사례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주요 법률들의 적용과 한계연구 	

▣ 주요 연구내용

- 사모펀드 규제내용에 대한 법제간 차이 분석
- 외국 사례의 연구
 - 미국의 사례(도드-프랑크법,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자법 등)
 - EU의 사례(EU 대체투자펀드운용사지침[AIFMD])
- 목차 (예시)

I. 서론 II. 외국 사례 분석 - 미국 - EU III.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사모펀드 규제 검토 IV.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향 사모펀드 진입규제 및 영업행위규제 사모펀드 운용규제 및 감독규제 사모펀드 규제차익 해소방안 V. 사모펀드 규제의 정합성 제고방향 VI. 결론
--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연구가 부족하였던 각 법령상 사모펀드 규제차익에 대한 법적 분석
 - 사모펀드의 투자행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기 위한 법제개선방향 검토자료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관련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또는 초기벤처기업의 경우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엔젤투자자 또는 벤처투자자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나, 인적·물적시설 등의 기본 임프로그가 열악한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자본시장법상 소액온라인투자중개업자 제도 시행에 따른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벤처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법률 적용의 적정성 및 투자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미국의 경우 JOBS Act를 제정하여 신생기업에 대한 공시 및 회계감사 규제를 완화하고 일 반투자자 대상의 광고 및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등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입법화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소액공모에 대한 특례로 온라인 방식으로 소액공모를 하는 업자에 대한 규제 를 자본시장법내에서 규율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중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 위에서 자금의 조달을 영업으로 하게 됨
- 자본시장법상 클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으나, 동법개정안에서는 창업·벤처기 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자권유규제 및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공시규제의 적 용을 상당부분 적용 배제함에 따라 동제도를 통해 자금조달에 참여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입장을 정리할 필요
- 기존의 소액공모제도, 벤처캐피탈 관련 제도와 비교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 위규제가 적정하게 규율되어 있는지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등이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 및 온라인소액공모 제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 연구 목적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금융소외현상을 완화하고 소규모 직접 금융조달의 여건을 제고하여 IT기업 및 신생혁신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보장할 방안의 마련 을 요함
- 현행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둔 기업에 대하여 그들의 기술 력 및 업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자율적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인해 아이디어 만 있는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현상을 해결할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 현행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와 새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온라인소액공모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창업·벤처기업의 영업기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우드펀딩 실태 • 해외사례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방식 검토 및 신규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분석 • 외국사례연구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및 투자자보호 관련 법제도의 적용과 한계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자본조달에 대한 법제간 차이 분석
- 외국 사례의 연구
 - 미국의 사례(JOBS Act)
 - 기타의 사례
- 목차 (예시)

I. 서론 II. 외국 사례 분석 - 미국 - 기타 III. 창업·벤처기업 자본조달 방식 검토 IV. 창업·벤처기업 자본조달 방식 규제체계 개선방향 - 엔젤투자 및 벤처투자 현황과 규제 -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

- 온라인소액공모제도 시행에 따른 투자자보호 강화방안
 V. 창업·벤처기업 자본조달의 적정성 및 투자자보호 제고방향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창업·벤처기업 자본조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법적 분석
 - 창업·벤처기업 자본조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개선방향 검토자료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간의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운영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제1기 민선자치의 시대를 거치면서 당초 자치단체장들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60%에 해당되는 1백 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치닫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를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 재원조달 능력과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해서 지역간 재정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간의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재정조정 역할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의 편차 및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빈번히 자행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운영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함

■ 연구 목적

-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지원체계에 대한 연구는 세원의 배분분제, 지방세와 국세와의 관련성 및 세외수입 등 지방재원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원에서 지방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논점을 두고자 한다.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운영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파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일반법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기능과 지역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현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양여금제도의 운영실태 지역간 재정력 격차 지역불균형의 실상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차원에서 지방조정제도의 개선방향 및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통계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도출 외국사례연구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지방조정제도의 개선방향 및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분석
- 외국 사례의 연구
 - 영국의 사례(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세율 등)
 - 일본의 사례
- 목차 (예시)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 III. 지방교부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 검토 I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준 결여 2. 국고보조금제도와 중복에서 오는 지방양여금제도운영상의 비효율 V.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4	5.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4-5-114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2	4	5.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4-5-11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	4	5.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4-5-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4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5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연계방안 제공
 - 지방재정격차의 완화,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각 제도들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
 -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모색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보조금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지방분권의 흐름속에서 지방자치역량의 강화가 중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역량은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재정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급선무이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보면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력 격차와 세원의 지역적 편재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 보조금사업은 국가 차원의 목적사업이나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권력의 지대한 관심에 의해 직간접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해 지방보조금사업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물론 그 효율성을 등한시 한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방재정조정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오히려 지방재정의 편재 및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빈번히 자행되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상위정부의 보조금제도가 하위정부의 재정문제의 해결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지 보조금재분의 방법과 보조금사업의 내용 및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연구 목적

- 중앙과 지방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보조금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보조금재분의 방법과 보조금사업의 내용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최근 지방분권의 흐름속에서 지방자치역량의 강화가 중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역량은 지방재정력 강화와 건전재정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모색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제도의 이념과 일반법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제도의 향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현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지역간 보조금배분 격차 지역불균형의 실상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과 지방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보조금 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통계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보조금교부 및 운영실태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출 외국사례연구 보조금재분의 방법과 보조금사업의 내용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주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외국 사례의 연구
 - 미국의 사례(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 등)
 - 일본의 사례(삼위일체개혁의 적용가능성 및 한계)
- 목차 (예시)

I. 서론 II. 정부간 보조금제도의 이론적 논의 III.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제도의 실태 IV.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방안 1. 보조금사업운영의 문제점 2. 보조금의 지방재정력 격차 해소방안 V.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4	5.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4-5-114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2	4	5.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4-5-11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3	4	5.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4-5-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4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5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방향 모색
 - 지보조금 배분의 방법과 보조금사업의 내용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
 - 도비보조금 사업목적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선방안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주택저당증권의 현실과 MBS법제의 개선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 주택문제는 1960년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과제가 되어 왔다. 경제성장기에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의 수단으로 남용되었던 주택보유와 거래의 문제는 각종 사회문제의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부동산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주택 부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는 주택금융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MBS는 금융기반을 확충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법에 의한 주택금융상품으로 여겨졌으나 시장의 수요에 비하여 그 발행이 매우 부진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금융의 원활한 조달과 자금공급을 위해 현행 MBS에 관한 금융법제의 개선이 요구되며, 이는 중요한 정책적 연구과제에 해당함

■ 연구의 필요성

- 주택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고질적인 해결과제였으며, 과거 과도한 주택가격의 상승과 이에 대한 통제는 주요한 경제과제로 여겨져 왔으며, 이른바 불로소득과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되어 왔음
- 주택가격 상승기에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의 사람들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반면에 주택을 1채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임.
-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민들의 주택구입은 쉽사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경제성장의 침체와 맞물려 주택가격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주택거래도 정체되어 있어 건설경기는 급하게 하락하고 있음.
- 주택금융 부분의 자금경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역시 위축되고 있는 형편임.
-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비용을 조달하여 주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금융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로써 주택저당증권(MBS)를 통한 장기자금조달에 필요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MBS는 주택저당채권이나 그에 관련된 권리의 유동화를 통해 - 즉 주택자산과 증권을 결합하거나 또는 주택에 관련된 권리의 증권화 - 주택금융의 자금조달을 확대하도록 하는 경제적 기능과 효과를 갖게 함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유동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발생한 IMF외환위기 이후 부터라고 볼 수 있음
- 1998년 9월 16일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유자산의 유동화 촉진과 자산유동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법률 제5555호, 1998. 9. 16, 제정)이 제정되면서 민간 MBS의 발행이 시작되었음
- 이후 1999년 1월 29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법률 제5692호, 1999. 1. 29, 제정), 2003년 12월 31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7030호, 2003. 12. 31, 제정)이 제정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하는 MBS가 주택유동화 증권시장에 나타나게 되었음
- 그렇지만 국내 MBS시장은 잠재수요에 비하여 그 발행이 매우 부진하며, 특히 민간 MBS의 발행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주택자금의 조달의 원활히 하고, 주택금융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MBS관련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 주택저당증권의 한계와 커버드본드의 입법 방향 - 연구자(년도): 송호신(2012) - 연구목적 : 주택저당증권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의 입법화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법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저당증권의 한계 - 커버드본드 입법의 필요성 - 커버드본드에 대한 외국법제의 추이와 외국입법례 - 커버드본드 입법의 제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 은행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연구 : 주택저당증권을 중심으로 - 연구자(년도): 신대섭·박정대(2004) - 연구목적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현황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실무실태 파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제도의 이론배경 - 미국의 유동화 현황 및 전망과 주택저당증권 현황 - 주택저당증권의 현황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 주택저당증권시장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 임윤수·최완호(2004) - 연구목적 : 주택저당증권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저당증권 유동화제도 개요 - 주택저당증권 시장의 현황 - 활성화방안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주택저당증권(MBS)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택금융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유동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제의 개정을 다루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법령조사 - 연혁법적 연구 - 비교법적 연구 - 입법론적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실무가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저당증권의 의의와 입법경과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방식과 법적구조 - 주택저당증권의 시장현황과 법적문제 - 주택저당증권의 법제개선과 법적보완
-------------	--	--	--

■ 주요연구내용

- 주택저당증권의 의의와 입법경과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방식과 법적구조
- 주택저당증권의 시장현황과 법적문제
- 주택저당증권의 법제개선과 법적보완

■ 연구추진방법

- 각종 국내외 문헌 및 자료검색과 검토
- 외국의 관련 법령의 조사
- 국내 관련 법령의 조사
- 연역법적으로 MBS의 전개과정의 고찰
- 입법론적 연구
- 전문가의 자문 및 실무가에 대한 검토 문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외 전 부처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경제운영	1-1-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 기대효과

- 주택금융증권 법제도의 개선
- 주택금융 자본조달의 원활화

- MBS의 근거와 자료 제시
- 주택금융 시장은 안정화 도모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1.1	종료일	2015.12.31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해상운송 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한 해상법제의 개선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 해상법의 기본법은 상법 제5편 해상법이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들은 해운법과 해사안전법, 개항질서법, 선박안전법 등이 있다. 그렇지만 해상운송에 관련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해상운송 안전의 대응체제는 미흡한 상태이다. 해상운송 안전제도의 기반을 구축을 위한 해상법제의 개선과 여러 해상법제들 사이의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정책연구로 구분됨.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이며, 북쪽이 가로 막혀 있어, 해상을 통한 여객이나 물류의 운송은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세계 7위로 부상하면서 운송화물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교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외 여행자의 증가로 인한 여객운송의 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해상운송 여객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음.
-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 각국의 FTA협상 등으로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세계 운송은 커다란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여객과 물류 운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과거 우리나라는 운송 물류시설의 확충과 현대화에 주력하여, 해상운송 물류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였으나, 운송 물류의 핵심은 건물이나 시설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운송의 안전이 담보되어 함.
- 2014년 세월호 참사는 해상운송 안전 체제의 현실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며, 해상운송 안전제도 개선과 정비의 필요성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음.
- 이와 같은 필요에 비추어 볼 때에 해상운송의 안전에 필요한 체제의 마련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해상운송의 안전제도의 마련을 위해 현행 해상운송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제5편 해상편에 해상운송 안전에 관한 기본 규정을 입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각종 해상관련 법령들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해상운송 안전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해상안전 관련한 인법 30여개 이상 관련 법령들에 대한 충돌이나 중복 등의 내용에 대한 관련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실무상 필요한 해상운송 안전에 대한 기술기준, 설계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 안전종사자의 안전표준지침 또는 안전매뉴얼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안전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우성구·한낙현(2010) - 연구목적 :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법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안정의 위험요인 - 국제해상안전의 중요성과 국제규범 - 해상안전의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 항만물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입법의 제안 - 연구자(년도): 송호신·윤창술(2013) - 연구목적 : 항만물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실무실태 파악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안전사고와 안전관리의 실태 -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한계 - 항만물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입법안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 미국의 1995년 해상운송안전법안 - 연구자(년도) : 해사문제연구소 편집실(1995) - 연구목적 : 미국의 1995년 해상운송안전법안의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의 내용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상운송 안전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상 운송 제도의 체제를 정비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의 개선과 정비를 위한 법이론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법령조사 - 연혁법적 연구 - 비교법적 연구 - 입법론적 연구 - 전문가 자문 및 실무가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 안전의 의의와 내용 - 해상운송 안전사고에 대한 국내의 상황과 실태 - 외국의 실태와 현황 -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법제도의 해결점의 모색

■ 주요연구내용

- 해상운송 안전의 의의와 내용
- 해상운송 안전사고에 대한 국내의 상황과 실태
- 외국의 실태와 현황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현행 해상운송 법제도의 문제점
- 법제도의 해결점의 모색

■ 연구추진방법

- 각종 국내외 문헌 및 자료검색과 검토
- 외국의 관련 법령의 조사
- 국내 관련 법령의 조사
- 연역법적으로 해상운송 안전의 발전과 전개과정의 고찰
- 입법론적 연구
- 전문가의 자문 및 실무가에 대한 검토 문의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관련부처
법제처, 국토교통부 외 전 부처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4	2.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4-2-93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기대효과

- 국내의 해상운송 안전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과 정비
- 우리나라 해상운송 안전의 선진화
- 해상운송 안전을 위한 근거와 자료
-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와 국내외 여객 및 물류 등의 이용활성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1.1	종료일	2015.12.31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논의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 논의 및 한미FTA 체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된 이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한미FTA 체결과 함께 저작권법 등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들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우리 법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법체계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 독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 및 한미FTA 등의 체결과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작권법에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 이들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위하여 위의 3배배상제도 내지 법정손해배상제도가 합리적 대안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보배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손해배상제도의 논의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의에 많이 치우쳐 있음. 우리 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독일법체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어떠한 제도 내지 법리를 통하여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도적 시사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중소기업 내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가 도입한 3배배상제도 내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성격을 규명함.
- 독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학술적 논의 및 입법적 논의의 내용을 살펴봄
-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 하도급법상의 3배배상제도에 대한 검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검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미국 주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주로 소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연혁 및 그 법적성질에 대한 고찰 및 우리법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 중소기업 및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독일의 법적 장치를 연구함.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법리를 연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손해배상법 독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논의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이득의 환수를 위한 법리를 연구 우리 법에의 시사점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의 법정손해배상 내지 배액배상제도의 법적 성격규명
- 독일의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 독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의
- 독일에서의 부당이득환수를 위한 법리

○ 목차 (예시)

I. 서론
II. 하도급법상의 3배배상제도
- 의의
- 법적 성질
- 요건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III.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
- 의의
- 법적 성질
- 요건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IV. 독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V. 독일에서 징벌적손해배상 내지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논의
VI. 독일에서 부당이득의 환수법리
VII. 우리법에의 시사점
VII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특히 독일)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국토교통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	1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3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4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9	소비자 권익보호
4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독일 손해배상법제 및 부당이득의 환수 법리의 이해
 -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리의 발견 및 그에 대한 체계적 논의
 - 우리법체계상의 손해배상제도의 개혁논의에 기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동산·채권담보의 운영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 2010.6.10. 제정되어 2012.6.11.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 내지 채권담보제도의 운영현황 및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6.11. 시행된 이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산담보 내지 채권담보제도의 운영현황과 법적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동법 제정 당시에는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제공할 수 있었던 한계가 있었던 바,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임.
- 채권담보 내지는 동산담보제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동법 시행 후 현재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19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담보제도의 개혁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 제도화된 동산담보 내지 채권담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 동법의 입법 당시 UN의 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나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등이 소개되고, 우리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 그러나 당시에는 DCFR 등 많은 외국의 동산 및 채권담보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도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본래의 입법취지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주고 있는지 검토하고 만약 장애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폭넓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현행법상의 해결가능한 대안의 제시와 함께 입법적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성립, 내용, 효력 및 실행 등 법률관계의 내용을 다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담보등기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담보등기제도의 운영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인터넷 등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서비스, 전자신청제도의 도입, 집행절차의 개선 등을 제시함.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 내지 채권담보의 운영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함. 추가적인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담보 내지 채권담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규명함. • 외국법제의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현행 동산·채권담보의 운영현황 연구
- 외국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연구
 - 미국
 - 유럽연합
 - 독일
 - 영국
 - 일본 등

○ 목차 (예시)

I. 서론 II. 동산·채권담보제도의 운영현황 III. 외국의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법제 및 운영현황 IV.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V.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무부, 대법원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1	1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동산·채권담보법의 운영현황 및 법적 문제점 규명
 - 현행법상 대안의 제시 및 입법적 대안 마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동산·채권담보 관련 법안 제안 및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시 심사기준의 합리성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이나 금융지주회사에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의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권한 행사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상당할 정도로 강하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 대주주를 심사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범위와 어느 강도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생명, 한화화재 등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벗어나 케이스가 바로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쌍용화재보험 주식회사 인수이다.
- 보험업법의 규정으로 대기업과 결합된 보험회사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정치권에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새로 제정하여 6개의 업권에 공통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치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업계의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경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의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연구 목적

- 주요 선진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존재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외국의 법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6개의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금융지배구조법이 타당한가를 분석 검토한다.
- 보험회사의 대주주를 주기적 심사하는 것은 동의하되, 그 범위와 시기 및 강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보험업법 및 새로 제안된 금융지배구조법(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기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김기식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현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주화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주요국의 입법태도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시기준의 합리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지배구조법안 분석 외국사례연구 보험업법 주요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 합리적 기준제시 	

▣ 주요 연구내용

- 보험회사 대주주 행위 보험업법의 시각에서 분석
- 외국 사례의 연구
 - 미국의 사례(보험법)
 - 일본의 사례(보험업법)
 - 독일의 보험감독법
- 목차 (예시)

I. 서론 II. 외국 사례 분석 - 미국 - 일본 - 독일

III. 보험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검토 IV.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주주 분야 상세 고찰 1. 김기준의원 발의안(기업지배구조) 2. 김기식의원 발의안(기업지배구조) V. 보험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합리적인 기준제시 VI. 결론
--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국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32	기업지배구조 개선
2				
3				
4				
6				
6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대주주를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자는 안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제시함
 - 보험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주주로서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제시함.
 -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보험회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함.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생협 의료공제사업 관련 법제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른바 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결과 상당히 많은 위법 사례가 발생된 바 있다(2011년 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조사결과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이 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운영상태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가 있음.
- 의료협동조합에서 특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법령위반사항임.
- 총 23개 조문에서 총 8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른바 ‘생협법’)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범위의 확대, 공제사업 허용, 연합회·전 국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생협이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고 생산하며 가공해 공급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됨에 따라 일반마트와 마찬가지로 식료품,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판매가 가능 하게 되었음.
- 이러한 생협 가운데 의료생협의 경우 설립이 증가되면서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영리 추가 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및 지배구조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연구 목적

- 의료생협의 주된 위반사항을 보면,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감사보고서 미작성, 임 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은 상조사업 등의 영위, 생협법상 금지되어 있는 조합 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다.
- 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 등을 파악하고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고 함. 그러나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법제를 개정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생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사업 현황 및 감독 강화 필요성(김경환/박정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공제에 대한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을 피력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사업 등 생협의 건전성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현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협의 활성화 소비가 주인되는 사회 생협의 부작용 예방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함. 특히 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과 지배구조는 심각한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격분석 및 검토 외국사례연구 재정건전성, 지배구조, 경영의 사유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 **주요 연구내용**

- 생협의 행위에 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다각적인 분석
- 외국 사례의 연구
 - 미국의 사례
 - 일본의 사례
 - 독일의 사례
- 목차 (예시)

I. 서론 II. 외국 사례 분석 - 미국 - 일본 - 독일

III. 생활협동조합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비교 검토 IV. 생활협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분석 1. 생협의 재정 문제 2. 생협의 지배구조 V. 생협의 발전과 개선방안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입법조사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10.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1-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연구가 부족하였던 생협의 행위에 대한 생활협동조합법 분석
 - 생협 활동이 조속히 정착 및 정상화되기 위한 생활협동조합 및 공정거래법의 개선방안 검토 자료 제공
 - 생협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하는 것인바,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해당 법규를 개정하고, 법제의 완비 하에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법적 제도가 미흡하여, 행정상의 긴급재정관리제도 이외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지자체 파산법의 제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임. 그 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룸.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에 이르러,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작년기준 15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임.
- 지자체의 파산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사법(私法)인 파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재정재건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의 경우 지자체 파산제도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절차로 할 것인지, 현행 정부가 시행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방법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주무장관의 취소정지권, 사전승인제,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직무이행명령에 의한 행정적 통제 등이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이분화되어 있고,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어 이로 인해 지자체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후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게을리하여 디폴트 상황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그대로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돌아감.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내지 상급 지자체가 지자체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이 큼.
-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디폴트 상황이 되어도, 일반 사인과는 달리 지자체는 공법인으로서 존속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 제도가 필요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2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및 지자체 파산요건 등 입법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수성 외국사례연구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요건

▣ 주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파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
 - 독일의 사례(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및 연방행정재판소 판례 등)
 - 일본의 사례
- 목차 (예시)

I. 서론 II.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외국의 사례 - 독일 - 일본 III.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찬반론 1. 지자체 파산 부정설 2. 지자체 파산 긍정설 IV.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수성 V.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의 방향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안전행정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2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연구가 부족하였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제도적 장치 마련
 - 공공부문 부채 및 재정안정성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 파산법 등 법안의 기초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남북한 통일과정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법제 통합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의 정비 및 우리나라 법제의 제·개정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 • 통일조약 등 남북한 협상에 대비한 기초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이 통합되는 데 필요한 통일조약 체결시 필요한 법적 기초 자료로서 활용 • 특별법 제정으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갈등상황에 대처함으로써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국적에 대한 헌법적합적 해석 지침 마련, 북한 지역의 토지소유권의 귀속 문제 및 분쟁에 대비한 법해석 등을 마련함 -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현행 우리의 법제도 중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제도 등에 대한 법개정안을 마련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남북한이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데 2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나는 현행 실정법(특히 헌법 및 통일관련 법률)이 장애적 요인이 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석 내지 개정)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새로이 필요한 법률제도나 실정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통일 전 준비단계에서 통일과정 중 필요한 각 주요 영역별 입법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 남북한 법제 통합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입법 자료 제공.
- 통일 관련 법제정시 입법 및 정책적 자료 제공.
- 특별법 제정으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갈등상황에 대처함으로써 통일비용 감소에 기여.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2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및 지자체 파산요건 등 입법에 필요한 중요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특수성 외국사례연구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요건
------	---	--	---

▣ 주요 연구내용

- 통합 선거법
- 개정 국적법
-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 분야의 특별법안
- 화폐, 경제질서 등 경제분야의 특별법안

경제통합단계	내용과 과제	
	경제통합	북한의 경제개혁
공동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이동, 화폐교환비율 생산표준화, 해외시장진출 노동시장, 사회보장 통합 교통통신에너지 단일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재산제 · 시장진입자유 시장퇴출장벽 국제금융기구 협력 경쟁법제 도입
경제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화통합, 경제통합 중앙은행, 은행제도 통합 자본시장 단일화 조세재정체계 단일화 산업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규제법제 자본시장법제 파산법제 정비 시장법제 통합
경제질서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통합법제 완비

○ 목차 (예시)

I. 서론
II. 통일과정에서 문제되는 법률 등
III. 통합 선거법
IV. 개정 국적법
V.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 분야의 특별법안
VI. 화폐, 경제질서 등 경제분야의 특별법안
VI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통일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5	2.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5-2-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2	5	2.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5-2-126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통일을 대비한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제도 마련
 - 현행 법제에 통일과 충돌이 있던 법제 개정에 대한 방향 제시
 - 통일의 준비하는 실질적 준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입찰참가 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하여는 과잉규제, 이중제재, 포괄위임 등 논란이 많은 제도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법 위반사유 발생시 행위의 위법성 정도 등에 구체적인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1월 ~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규제 등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처분의 대상자인 기업에게는 그 제한기간 동안 당해 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사업분야의 모든 공공분야 입찰(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형벌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은 형벌을 능가하는 효과를 발생함
 - 그 효과는 영업정지와 동일하며 경제위기, 당해 산업침체 등 시장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다수 중소기업체의 파산 우려가 있으며, 해외수주를 추진중인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수주에 장애 초래
- 또한 현행 우리나라 제재 체계상 형벌 및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필요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동시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제재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한사유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이에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획일적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대다수의 입찰참가업체가 제재를 받을 경우,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수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공정한 경쟁입찰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 과잉규제, 이중제재, 포괄위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가계약의 공정한 집행 및 적절한 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당업자제제제도 개선 방안(20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당업자 제제제도(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중심으로(2011, 전국경제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기업들의 인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동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선행연구는 기업체친화적인 연구일 뿐만 아니라 소논문 수준에 불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체계 및 성격분석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주요국가의 비교법적 연구 실효적인이고 합리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현황, 체계, 성격 분석
-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문제점
- 주요국가의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EU, 독일, 일본 등
- 목차 (예시)

I. 서론 II.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현황과 본질 III. 주요국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 미국, 영국 - EU, 독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IV.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문제점 V.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VI. 결론
--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의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9	소비자 권익보호
3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체계적이고 비교법적 연구가 부족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자료 및 비교법적 연구자료 제공
 - 국가계약의 공정한 집행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자료 제공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구축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지속발전이 가능한 재정기초를 위한 헌법개정 연구

- 국가부채제한의 헌법도입을 위한 유럽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그리스 및 유럽연합 내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의 예산 운영에 대한 통제강화 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통합과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기초와 국가예산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유럽연합의 경험에 관한 법적 연구가 전무하고, 이에 관한 법적 의미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없어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해결과정에 나타난 법적 조치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헌법(내지 최소한 일반법률)에서 규범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09년부터 시작된 회원국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유럽연합의 조치들이 건전한 국가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특히 국가부채제한의 강화를 중요한 해결방법으로 삼으면서 건전한 국가재정운영이 위기극복을 위한 해결책 및 예방책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유럽연합조약 제119조 내지 제126조에서 경제재정정책에 관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재정위기 문제가 발생하여 유럽연합은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 아무런 조항도 없어서 일방적으로 의회의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정치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처럼 외부에 의한 강압적이고 주권제약적인 해결에 의존할 위험이 있음.
-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건전한 국가의 재정기초를 불안정한 정치적 타협에 맡기지 않고,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반을 두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국가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소모적인 이념적 논쟁에 빠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내용임을 논증하고 설득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뿐만 아니라 경험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운영에 관한 재정준칙의 헌법규범화는 단순히 이론의 문제가 아닌 현대 국가공동체의 중대한 과제임을 유럽연합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의미를 심도있게 도출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2009년 촉발된 그리스 국가재정위기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닥친 재정위기의 원인을 규범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조약상 조문(제1차법)과 명령 등(제2차법)의 내용과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함.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들(제1단계 유럽재정안정제도(EFSM: 소위 그리스 구제금융), 제2단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제3단계 상설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 제4단계 유럽중앙은행의 OMT(소위 무제한 국채매입))의 과정에서 나타난 목적과 방향 등을 연구함.
-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정위기 해결 방향이 단순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 임시방편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안정적인 발전과 통합을 위한 재정준칙의 확립과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재정기초의 확립임을 확인함
- 유럽연합의 경험을 통해 우리 헌법개정 시 재정조항의 도입 내용 중에 지속가능한 재정기초의 확립을 위한 헌법규범으로서 재정준칙의 헌법도입 가능성을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해결에 관한 경제적 측면을 연구한 내용은 여러 경제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이를 분석한 자료들은 전무함.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국가재정위기 해결에 관한 규범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선행연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해결 시 기본적인 방향 분석 • 유럽연합의 재정정책 규율에 관한 규범 체계 연구 •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조치들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 연구 • 한국 헌법개정 시 재정조항과 관련한 개정내용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주요 연구내용**

-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건전한 국가재정기초 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도출
- 유럽연합의 재정위기 해결과정 연구
 - 유럽재정안정제도(EFSM: 소위 그리스 구제금융)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 상설적인 유럽안정화기구(ESM)

○ 예상목차

I. 서론
II. 유럽연합의 회원국 재정정책에 관한 규범구조
1. 경제통화연합
2. 경제통화연합의 구조적 문제
3. 경제통화연합의 규범적 문제
III.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치들
1. 유럽재정안정제도(EFSM)
2.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3. 식스팩(Six Pack)
4. 재정협약
5. 유럽안정화기구(ESM)
IV. 유럽연합 해결방법의 의미
1. 재정기율의 강화
2. 재정정책의 통합
V. 한국헌법에 주는 시사점
1. 재정규범의 헌법규범화 필요성
2. 실천적 규범화로서 헌법개정안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법규범 조사

- 회원국의 재정관련 유럽연합조약 제1차법 및 명령, 규칙 등 제2차법 조사 및 분석
- 회원국의 재정관련 헌법조문 조사 및 분석(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법제연구

- 유럽연합 및 독일의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0	건전재정기초 정착
2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1	공공부분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3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4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6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기존의 연구가 전무한 유럽연합의 재정관련 규범연구의 선도 및 촉진
 - 사후 재정관련 공법적 측면에서 규범과 정책 분석에 있어서 검토자료 제공
 - 유럽연합의 통합과정 뿐만 아니라 공동체형성과 운영과정에서 재정부야 규율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가기관의 예산정책 수립에 참고
 - 헌법개정시 개정 근거자료 제공
 - 그 밖에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가능
- 기타 기대효과
 - 재정법연구의 공법분야 연구 활성화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2015.1.1.	종료일	2015.12.31.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비:

▣ 연구과제명

스퀴즈아웃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제도는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강제매수청구인지, 상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지분의 가치에 관한 공정한 가액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예상되며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 지분의 지분가치 평가에 관한 방법 및 그 타당성이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다.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강제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존에는 소액주주의 강제적 축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주식강제매도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소액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 법은 태생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큰 제도로서 소수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해야하기 때문에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즉,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제23조1항), 자기결정권(제10조), 평등권(제11조1항) 등을 침해할 수도 있음.
- 위헌의 소지 외에도 ‘경영상 목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며, 매도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음.
- 제도의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1.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할 것
 2.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3. 소수주식의 공정가액에 대한 공인 감정인의 평가 및 그 감정결과에 대한 공개
- 이러한 요건들 가운데 특히,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의 해석이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소수주주를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소수주주로 인하여 과도한 관리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수주주의 방해나 주주권 남용으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액주주 강제추출제도는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소액주주 강제추출에 있어 지급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와인버거(Weinberger) 판결에서는 시장가격,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전통적인 3가지 평가요소 외에 합병의 미래 가치 등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요소를 평가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 이 제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갖추어진 정당한 강제매수청구인지, 상법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소수주주 지분에 관한 공정한 가액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분쟁이 예상됨.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 지분의 지분가치 평가에 관한 방법 및 그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영상의 목적의 해석과 관련된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확정하고, 공정가액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논문제목	목적과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기업구조조정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추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소수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주주총회 하자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에 있어서 소수주주보호에 있어서의 장단점
	2	“주식강제매수제도와 소수주주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강제매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해석 및 문제점의 지적과 대안제시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추출과 주식강제매수제도 •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의 해석
	3	“상법상 소수주주 추출방안과 관련한 법률상·실무상 쟁점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교부금합병,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사문화 방지를 위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의 합리적 해석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추출방안 • 소수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의 관련된 쟁점 • 교부금합병과 관련된 쟁점

<p>본 연구</p>	<p>“스퀴즈아웃 법제 개선방안 연구 -주식강제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비교법적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독일에 있어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비교·분석하여 개별 요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 및 공정가액산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비교법적 연구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권의 행사요건 비교·분석 • 외국사례연구 • 구체적 해석기준 및 공정가액산출 방안
--------------------	--	---	---

▣ 주요 연구내용

- 강제매수제도의 효용
- 강제매수요건
 -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할 것
 - 주주총회의 사전승인
 - 소수주식의 공정가액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평가 (매도가격) 및 그 감정결과에 대한 공개
- 미국과 독일에 있어서 강제매수요건
- 요건의 비교·분석
- 구체적 해석기준의 제시와 공정가액 산출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외국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필요한 경우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32	기업지배구조 개선
2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1-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3	1	1. 창조경제 생태계조성	1-5-6	협력적 기업생태계조성
4	4	4.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4-4-109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제도의 취지에 대한 연구와 깊은 이해에 비해 성문화된 내용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있었으나 청구권의 행사요건의 해석을 통하여 법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임.
- 매도청구권의 도입취지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해석을 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법문에 얽매인 엄격한 해석을 할 우려가 있지만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고 법규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음
- 공정한 가액을 평가하는 방안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궁극적으로는 상법 관련규정의 정비를 통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기왕 도입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가 사문화되지 않을 수 있음.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법무부 산하 상법특별위원회의 과제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본질 및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 행사절차와 행사의 효과뿐만 아니라 매수가액의 산정을 위한 기준 등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관련 정책의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12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대재해위험의 담보와 대재해채권(CAT-Bond)의 법제도화 연구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보험에 있어서는 단체를 구성하는 가입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더욱이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금고갈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년)로 인한 손해액의 절반 수준인 3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샌디(2012)로 인해 다수 손해보험사가 파산한 사례는 이러한 보험제도의 한계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 보험사의 파산위험은 일반 손해보험사 뿐만 아니라 최근 농업재보험사업을 떠안은 정부에도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환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2007년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재해위험도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큰 규모의 (자본)시장에서 위험을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CAT-Bond)을 이용하여 위험을 처리하고 있다.
- 보험으로 위험을 관리하던 때와는 달리 자본시장에서 채권(CAT-Bond)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에서는 특히,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법제적 측면에서 보험제도와 증권제도의 조화, 새로운 이론체계의 구축이 과제로 남는다. 이 연구는 CAT-Bond의 도입과 관련하여 입법례, 경제적 효과,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뒤이어 채권의 발행주체인 특수목적회사(SPV)의 조직형태와 감독문제, 채권발행의 장소와 시기, 장외거래와 관련한 규제문제, 특별법 제정 여부, 정부의 국가재보험사업 수행기구의 신설여부 등과 같은 법률상의 여러 가지 난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 주요위험의 관리는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생존의 조건이기도 하며 동시에 경쟁력의 기본이다. 개인 및 국가의 생존조건이라 할 수 있는 기상변동으로 인한 재해위험도 마찬가지로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제도를 통해 저감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 위험의 담보방법으로는 ① 자가대비, ② 이익단체에 분산, ③ 위험의 외부이전이라는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바, ① 자가대비는 개인저축이나 기업의 준비금의 적립과 같은 자율적 대비방식을 말하고, ② 위험단체 분산방식은 보험과 같이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 구성원에게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말하고, ③ 위험의 외부이전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위험을 조직내부에서 외부로 이전함으로써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활동의 주요단위인 기업과 국가의 주요위험은 ②와 ③의 방법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③의 외부이전방식에서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그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환위험헤지라는 새로운 경향의 제도화를 태만히 함으로써 2007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본다면 국가경제의 가시적 위험은 즉시 대응수단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고, 대규모 재해위험도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대규모재해를 채권 발행의 형식으로 자본시장에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영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제기되었지만 법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이 연구는 한계에 직면한 국내 손해보험업계와 정부의 재보험사업을 대재해채권(CAT-Bond)의 발행을 통해 완화 내지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주로 법제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 기상변동위험은 결국 재보험, 대재해채권, 기후파생상품 등의 방법으로 경제단위 외부로 이전할 수 있으며, 각 방법은 위험담보의 영역이나 실행수단에 있어서 차별적이다.
- 우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대규모재해위험의 저감 내지 해소와 관련하여 (재)보험제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먼저 원보험자 내지 재보험자는 대규모 위험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한데, 보험료지급능력이 있는 다수 가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이를 실현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재해 또한 드물게 발생하므로 재해발생시점에서 멀어질수록 가입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일단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보험금 청구로 적립기금이 소진되어 보험자가 파산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수 보험자가 파산한 사례가 있다.
- 우리나라의 영리재보험사업과 국가재보험사업도 이러한 한계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즉, 농작물손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다수 손해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해 왔으나 루사, 매미 등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 이들 민간보험자들이 보험사업에서 이탈하는 사태가 2번이나 발생하여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한도를 확대하여 왔으며, 국가재보험의 기초가 되는 재해보상기금의 정부출연금도 해마다 변동이 심해 지속적 담보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를 대체 내지 보완하는 제도로써 대재해채권(CAT-Bond)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 대재해채권(CAT-Bond)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는 다음 사항이 있다.
 - (1) 채권발행의 주체인 특수목적회사(SPV)는 조직형태가 조합, 신탁,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인데, 회사형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업법 상 자본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회사에 불과하므로 자산유동화법 상 유한회사의 자본금 규제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주식회사를 이용한다면 상법을 적용하여 자본금을 규제하고, 운용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인지?
 - (2) 특수목적회사(SPV)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여부도 문제이다. 사업회사가 아닌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채권발행과 같은 투자업을 허용할 것인지의 인가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운용회사를 별도로 두어 규제를 할 것인지?

- (3) 또한 거래방식을 여하히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채권발행을 감독문제를 고려하여 장외거래와 거래소거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추진할 것인지?
- (4) 장외거래를 허용한다면 거래상대방을 기업에만 국한할 것인지 ?
- (5) 장외거래의 허용범위를 스왑에 국한할 것인지?(투자매매) 스왑중개(투자중개) 까지 허용할 것인지?
- (6) 특수목적회사(SPV)를 포함한 문제전반을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할 것인지?
- (7) 국가재보험사업은 기금을 활용하여 수익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그 형식을 준공공기관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업으로 분류할 것인지?

○ 목차 (예시)

제1장 최근의 경향
제2장 기상위험의 담보수단
1. 저축과 준비금
2. 보험
3. 파생상품
4. 채권
제3장 제도의 한계
1. 날씨보험
2. 기후파생상품
3. 재보험
제4장 국가재보험의 도입과 한계
1. 재보험
2. 재해공보험
(1) 풍수해보험 (2) 농어업재해보험과 국가재보험
제5장 대재해채권(CAT-Bond)
1. 자본시장과 대재해채권
2. 외국의 동향
(1) 유럽 (2) 미국 (3) 일본
3. 대재해위험의 특징과 보험원리적용의 한계
(1) 사고의 대규모성 (2) 사고빈도와 가입자 확보 (3) 보험사고의 동시성
4. 대재해채권의 발행
(1) 채권의 발행과 유통 (2) 법적 성질 (3) 거래규제
(4) 채권의 부도위험과 대재해채권의 원본상실 위험 (5) 발행효과
제5장 맺음말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법제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1. 창조경제생태계조성	1-1-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2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	4	2. 재해, 재난 예방 및 체계적 관리	4-2-92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 체계강화
4	4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4-3-9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6	4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4-3-99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이 연구를 통해 대재해채권의 도입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우선 보험회사의 위험이전이 가능하여 인수능력이 확대된다
기존의 원보험자는 대재해채권(CAT-Bond)의 발행을 위해 자신의 보험료채권을 특수목적회사(SPV)에 이전하고 동시에 초과위험을 이전한다. 이로써 원수보험자는 줄어든 부분만큼 인수능력이 확대되어 추가로 보험인수를 할 수 있다. 결국 대재해채권은 재보험사의 부담을 일부 내지 전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침체된 손해보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국내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이 줄어 보험시장이 위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신계약의 감소,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우리와 비슷한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계약인 보험계약에서 과거 고금리를 보장하며 판매된 저축성 보험의 만기까지의 보장책임을 보험자가 계속하여 현재의 낮은 운용수익률로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고, 방카슈랑스로 은행까지 보험상품을 취급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입지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대규모 재해로 인해 거액의 보험금 지급위험에 처한 (재)보험사의 입장에서는 CAT-Bond의 발행으로 채권투자자들이 위험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확대된 농어업재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재보험사업에 연루된 정부 입장에서도 재해보상기금의 적립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본다.

□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상품은 이자율, 환율, 주가 등의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기침체 시에는 전반적으로 투자수익이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재해채권(CAT-Bond)은 경제현상과 무관한 자연재해현상의 영향을 받는 점에서 경기변동위험을 대체하는 상품으로서 적격성을 갖추고 있다.

이때 보험사, 헤지펀드, 연기금, 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그 숫자도 1개의 CAT-Bond가 발행될 때 100-200개의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제공한다

대재해채권은 경기침체로 시장금리가 낮은 때에도 (MIDORI 지진 CAT-Bond 발행 시) Libor + 275bp(2.7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시현하고 있고, 2012년 미국에서 연간 투자수익률이 국채보다 11% 가 높았다. 그에 비해 투자위험은 정크본드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은 편이어서 저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 기타 기대효과

대재해위험의 담보를 내용으로 보험, 파생상품, 채권증권을 아우르는 이 연구를 통해 경영학 분야에서 얻은 자료를 법제적 측면에서 개량함으로써 경제경영분야의 이론 및 실무역량에 보탬이 되고, 법학계에도 보험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한 제도의 도입에 관한 본 연구를 소개하여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후속연구를 유발하여 재해실무분야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해상운송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여객운송이나 해상물건운송에는 매우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는데, 현재의 관련법령은 그 내용에 있어 상당부분 보완할 사항이 있음. 특히 기본법령인 상법 제5편 해상운송편은 2007년에 개정되었지만 체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관련된 선박법 등의 특별법령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해상운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여객 및 화주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상운송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국제화물운송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상운송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여객운송의 경우에도 나날이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객운송의 경우에도 선박의 크기와 운송속도의 증가로 인해 점차 운송량이 증가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주요 해상운송기업의 수익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는 갑자기 늘어난 운송기업들이 출혈경쟁을 함으로써 운송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력이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에 관련된 기본법인 상법 제5편과 선박법·선원법·선박안전관리법 등의 각종 특별법령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체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해상운송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이고 여객 및 화주의 보호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해상운송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여객 및 화주의 권익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해상운송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 해상운송에는 상법 제5편 해상을 비롯하여 선박법·선박안전법·선원법·선박직원법·도선법·해상사고조사심판법·해운법·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 등 매우 다양한 법령이 적용되는데, 규정내용이 정치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야기한 세월호 사건이나 원양어선 침몰사건 등의 경우를 볼 때 그동안 얼마나 적용법령이 미흡하였고, 또한 관련기관의 업무적 태만이 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음.
- 해상운송시스템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유용한 운송체계이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분야임.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의 합리성에 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연구 • 비교법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제5편(해상)상 해상 운송인의 면책사유인 선 박화재와 항해과실의 적 합성 여부 검토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 한의 적합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연구 • 비교법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합리성 여부 검토 •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제한 적용의 합리성 검토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본 연구는 해상운송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여객 및 화주를 합리적 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 향의 입체적인 해상법제 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비교법적 검토 • 실무적 전문가 자문 • 법률적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제도 의 총체적인 연구검토 • 관련된 외국의 법제 및 최 근 동향의 비교법적 검토 • 상법 제5편을 비롯하여 해 상운송에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 주요 연구내용

- 해상운송에 관련된 각종 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 분석 및 기업실무상의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진화된 해상법제의 구축
- 외국 사례의 연구
 - 미국의 사례
 - 영국의 사례
 - EU의 사례
 - 일본의 사례
 - 중국의 사례
- 목 차

I. 서론 II.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령의 체계와 주요내용 III.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령의 문제점 검토 IV. 해상운송에 관련된 주요국의 입법동향 검토 V. 해상운송에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VI. 결론
--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의 각종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해상운송에 관련된 각종 법령의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해상운송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동향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국토부, 국민안전처,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2-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2	1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3	1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1-5-29	소비자 권익보호
4	1		1-5-32	기업지배구조 개선
5	1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해상운송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한 상호연계관계 규명
 -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강구
 - 해상운송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분석을 통한 선진화된 해상운송법제의 구축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률 체계 및 감독체계에 관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2012년 7월 정부 주도하에 이른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법률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투자자보호원칙의 정립과 더불어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범위 등에 대한 균형적이고 적절한 기준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선진국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체계 및 감독체계에 대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의 법제개선 및 정책추진방향은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금융투자업계의 법률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투자자)보호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및 보호의 균형적 기준의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 도모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가 중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소비자보호에 치우치게 되면, 균형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투자자보호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의 참가자들에 대한 균형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과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통한 자본시장의 정비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혁 움직임이 금융선진국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도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재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따라서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원칙의 정립이 더욱 필요해짐.
- 금융소비자보호의 강화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법률리스크의 지속적 증가로 금융투자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나타남. 따라서 투자자보호에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범위의 균형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상생적인 발전이 가능한 방안으로서 금융소비자(투자자)보호에 관한 원칙의 정립과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범위의 구체화를 통해 지속적인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 문헌조사연구	- 주요법령상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내용 - 주요국가의 비교법적 고찰 및 평가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의 개선방안
	2	· 일본의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규제	- 문헌조사연구	-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국제동향 -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의 변화
	3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최선집행의무	- 문헌연구	-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최선집행기준의 구체화
	4	·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문헌연구	-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5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개선방안	- 문헌연구	-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국제동향 - 감독체제의 개선방안 - 사전적·사후적 개선방안
	6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방향	- 문헌연구	- 금융소비자보호와 거시건전성 확보의 관계 - 금융 감독체제의 비효율성 개선과 거시건전성 감독
본 연구		· 금융소비자(투자자)의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감독 및 보호방안의 확보를 위한 균형적이고 적절한 기준의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문헌연구 ·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반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 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정립 - 금융선진국의 입법례의 비교법적 고찰 -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균형적인 기준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금융소비자(투자자)보호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및 보호의 균형적 기준의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 도모 방안
- 외국 입법례의 비교검토
 - 미국의 입법례
 - 일본의 입법례
 - 유럽의 입법례
- 목차

- I. 서론
- II.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분석
 - 미국
 - 일본
 - 영국
 - 캐나다 등
- III.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국제적 동향 검토
- IV.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V.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제시
- V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의 관련문헌 조사 및 분석
- 법령 조사
 - 국내의 금융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적 연구
 - 주요 금융선진외국의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 의견 종합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법제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구축
2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1-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3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4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9	소비자 권익보호
6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6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5	금융시장불안에 선제적 대응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강자의 지위로만 파악되던 금융투자업자들의 법률 리스크증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자의 균형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영역 설정을 위한 기준 제시
 -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의무범위의 구체화를 통한 효율적 규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유도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입법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에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보호를 향한 일방적인 정책방향을 지양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업자의 균형적인 보호를 통한 바람직한 자본시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비과세제도를 이용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방안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으로 담뱃세를 인상을 추진하였고, 금연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였으나 담뱃세 인상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임. • 이번 국회에서의 담뱃세 인상 논의에서 명백해진 것처럼,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은 이미 소진상태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정책과 투자비용이 필요한 바, 더 이상 국민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만으로는 정부와 국민이 상호 윈윈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함. • 이에 비과세제도 특히 우리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교육자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을 연구하여 비과세제도 이용자에 대한 혜택 부여와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비혜택자에게도 경제활성화를 통한 간접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수확보방안의 연구가 필요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비과세제도를 이용한 안정적인 세수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국회에 류성걸 의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계존속의 교육비 증여 비과세제도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제출된 법안으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자감세라는 오명을 받고 법안이 철회되게 됨.
- 이 법안은 일본의 직계존속 교육비증여 비과세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비과세가 아니며, 교육자금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의 희망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마련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지 않은 채 사라짐.
-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는 말은 상식이 되어 있음. 경제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금융상품을 마련하여 노인층의 축적된 자금이 사실증여 등 비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정상적인 비과세제도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이 필요함.
- 그 밖에도 비과세제도에 대한 법 및 제도의 연구가 필요한 바임.

■ 연구 목적

- 비과세제도와 관련된 증여제도에 대해 실증 연구가 필요.
- 노인층의 축적된 자금 규모에 대한 연구 필요.
- 교육자금 증여 신탁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예상되는 은행권 등의 움직임 등 시나리오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증여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제도에 대한 일반 법리 증여제도의 경제논리에 대한 연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층의 축적된 자금 규모에 대한 연구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현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자노인층의 자금 규모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자금 증여 신탁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예상되는 은행권 등의 움직임 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현상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권 신탁상품 관리 등에 연구 경기 부양을 위한 은행권의 자금 운영에 대한 연구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더 이상 국민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가 아닌 정부와 국민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교육자금에 대한 비과세제도 등을 통하여 비과세제도 이용자에 대한 혜택 부여와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비혜택자에게도 세금인상의 자제를 통한 간접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수확보방안 연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외국사례연구 노인층 자금 규모, 은행 신탁제도 등 실증연구 조세특례법에 대한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비과세제도를 이용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방안 연구
- 외국 사례의 연구
 - 일본의 사례

○ 목차 (예시)

I. 서론
II. 외국 사례 분석
- 일본
- 미국
III. 비과세제도 일반에 대한 연구
IV. 증여제도에 대한 연구
V. 노인층의 자금 규모에 대한 실증 조사 및 은행권의 신탁운영에 대한 연구
VI. 법안 마련
VII. 결론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세미나 등 개최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2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3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연구가 부족하였던 비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검토자료로 제공
 -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교육자금에 대한 비과세제도로 비과세제도 이용자에 대한 혜택 부여와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비혜택자에게도 세금인상의 자제를 통한 간접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윈윈 연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2백

■ 연구과제명

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제문제의 법적검토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부채감소가 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음.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의 확보 그리고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이러한 연구는 재정법적 연구이면서도 행정법적 그리고 기업법적 연구라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의 확보 및 투명한 경영은 현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과제 중 하나임.
-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재정법상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임.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그러나 중국적으로 공기업 부채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인 점에는 이견이 없음.
- 국가적 측면에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전체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직결됨. 한편 최근의 공기업의 이슈 중의 하나가 지방공기업의 문제임.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지방공기업의 부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적으로 부담해야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화로 연결됨.
- 현행 각 공기업의 설치근거 법률 및 조례(지방공기업)는 업무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매우 모호한 규정을 둠으로써 정치적 간여의 여지를 넓게 열어두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이 본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정비할 필요.
- 공기업 자체의 경영평가제도 개선과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법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타당성 조사의 경우 사업추진이익을 과다하게 추정하는 등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진법제의 검토가 필요.
- 공법상 계약을 통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 즉 목표달성과 연임을 연계
- 중국적으로 공기업 파산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 청산형 파산이나 재건형 파산이나에 대한 검토. 파산이후 공공역무의 수행형태를 아울러 고려.

■ 연구 목적

- 오늘날 공공역무와 사회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역할은 매우 크고 지대함. 그러나 그간의 경영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무리한 시행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 공기업 부채의 총합은 일반정부의 것을 상회. 공기업의 문제는 재정법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 공기업법의 새로운 방향 및 공기업의 본래 기능의 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대응.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 공공기관의 역할재정립 -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개혁 정책에 대한 제언, 한국정책학회 The KAPS, 제36권 *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재정악화의 원인 공기업 개혁성과관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경영의 경영자율성 제고 : 기용성 외5인, 공기업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자율경영기반 조성 경영의 투명성 제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지배구조 : 선우석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정책과제, 공기업논총 제16권 제1호(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체제 확립 대주주로서 정부의 역할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성 제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 경영 : 이용수,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 운영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연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사례연구(일본) : 일본공기업의 발전과 현황, 법과기업연구,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공기업제도에 대한 일반론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 지배구조 : 정상근, 공기업 지배구조의 상사법적 제문제, 전남대 법학논총, 제33집 제3호(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사법적 측면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검토

<p>본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문제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임. 공기업의 기본권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넘어 구체적으로 재정법적 이슈를 검토. 즉, 준재정활동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능적 본질론을 법적으로 조망. 공기업의 파산가능성 검토까지 검토의 범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외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행 공기업법 검토 • 공기업 재정규율 검토 • 외국사례연구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검토
--------------------	---	---	--

▣ 주요 연구내용

- 재정통계기준과 공기업 부채
- 중앙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검토
 - 재정건전성 확보기제의 법적검토
-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적 검토
 -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상의 재정건전성 확보수단에 대한 검토
- 각 개별 공기업 설치법의 해석을 통한 공기업의 고유업무영역에 대한 검토
 - 준재정활동성의 판별을 통해 고유목적을 벗어난 정치적 사업을 배제
-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과 추진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상 계약을 통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평가 가능성 검토
 - 목표달성과 연임 및 보수의 연계
- 공기업 파산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청산형 파산이나 재건형 파산이나에 대한 검토
 - 파산이후 공공역무의 수행형태
- 외국 사례의 연구
 - 각 이슈별 외국사례의 연구 (미, 독, 일)

<p>I. 서론</p> <p>II. 공기업 재정건전성 현황 및 재정위기의 원인</p> <p>III.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수단에 대한 법적검토</p> <p>IV. 공기업의 사업범위에 대한 준재정활동성 논의와 법적통제</p> <p>V. 공기업의 파산은 가능한가 ?</p> <p>VI. 맺음말</p>

▣ 연구추진방법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예컨대, 공기업의 파산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11 U.S.C.A Chapter 7, 9, 11을 검토

전문가 면담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회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1-6-40	건전재정기조 정착
2	추진기반	2. 신뢰받는 정부	기반-2-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3				
4				
6				
6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향후 공기업 관련 법적 연구의 기반제공
 - 공기업에 대한 재정법적 이슈의 정리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제재조치에 대한 법적검토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기업과 소비자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소비자의 보호, 중소기업의 보호를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대기업간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은 강조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역할은 규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잘못 발현될 경우 경제질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절차와 제재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 이를 위해서 현재의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중소기업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소비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시장질서의 확립과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음.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 시장지배력 평가, 금융업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 불공정거래행위의 표지, 부당공동행위의 입증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원회의 조직구성, 공정위 조사 이후에서 제재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공법적 측면에서 연구 검토된 바는 거의 없음.
- 공정위 조직과 역할의 본질은 규제임. 규제수단이 잘못 발현될 경우 경제활동주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절차적 측면에서 그리고 제재조치의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와 그리고 적법성 및 합목적성이 담보되고 있는가를 검토.

■ 연구 목적

-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과정에서의 적법성 보장과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 조사 및 제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행사가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에 입각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높음. 따라서 조사 및 제재절차의 과정에서 대심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소송으로 이행하는 빈도를 낮출 수 있음.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태희,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 공적집행절차와 제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23권(2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결절차상의 사실인정 강화, 시정명령의 구체화, 이의신청이 실질화, 공정위 재량의 통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호열, 공정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법집행의 실제 : 사법적 통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 88권(200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구제주의 실현을 통한 공정위의 정치적 위험성 경감 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경, 미국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경제적 자유권과의 관계 및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적법절차의 준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영철,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mesasca, Peter D., EU의 카르텔 단속과 리니언시 프로그램, 한국 공정위 절차와의 비교 : 협력에 대한 보너스 또는 손해배상의 로드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니언시의 법적 성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명수,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13권(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관할사건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대응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에 개선방향을 제시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조사의 시작에서부터 제재까지의 전 과정을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적법성 확보,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분석 •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 도출 • FTC, OFT 등 주요국 경쟁당국의 절차 및 제재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및 제재의 전 과정 분석 • 판례의 쟁점 분석 • 주요국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주요 연구내용

- 공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공정위 조사와 심결절차
- 공정위 조사 및 제재와 행정절차법과의 정합성
 - 행정절차법 및 타 법령과의 균형성 및 관계성 검토
- 주요국 경쟁당국의 조사 및 제재와 시사점
- 리니언시 및 동의명령제에 대한 공법체계내에서의 해석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불복한 사안에 대한 판례 분석
-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IV. 주요국 경쟁당국의 조사 및 제재절차와 시사점 V. 리니언시와 동의명령제에 대한 공법적 해석과 시사점 VI. 공정위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 판례 분석과 시사점 VII. 공정위의 조사 및 제재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VIII. 맺는 말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5.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2			1-5-29	소비자 권익보호
3			1-5-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4			1-5-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구축
6				
6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지금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다면적 연구의 기반 조성
 - 사법과 공법 양 분야에서의 학문적 접근가능성의 제고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

■ 연구과제명

어음만기제한에 관한 연구

과제구분	정 책
구분 선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는 어음만기를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2014년 하반기에 포럼을 개최하였고 현재 TF를 운영하여 법안을 마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고 어음만기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 정책 연구에 해당함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기업거래 분야의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상품 및 용역대금의 공급과 회수의 문제임.
 - 지난 10여년간 전자화된 지급방식 등 지급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용역대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어음이 상당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음.
 - 정부 및 관련 당국은 원활한 자금의 공급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종이어음을 전자어음이나 단기사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아직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
- 어음이 장기로 발행됨에 따라 거래 후 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 이로 인해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됨.
-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어음의 유통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어음의 만기를 점차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음만기제한에 대하여 공론화하였고, 현재 TF를 구성하여 논의중에 있음.
-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어음이므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실무를 반영하는 현장감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될 경우 수취인의 자금경색 초래, 할인료 등 금융비용의 발생, 발행인 신용위험의 수취인 전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음의 발행이 언제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도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및 수취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과제 추천을 위한 전문가회의

- 어음이 결제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감안하여 실물경제 위축의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더불어 자금조달 수단의 기능 측면에서 기업어음(CP) 단기사채와의 규제차익 발생 예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향후 어음만기제도의 구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인식공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선행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만기제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고, 최근에 시작된 논의임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어음만기제한의 타당성 검토 및 어음만기제한 방식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현장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만기현황 분석 • 어음만기제한의 필요성 검토 • 외국사례연구 • 어음만기제한의 입법방식

■ 주요 연구내용

- 어음의 발행과 수취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어음만기 현황을 분석함
- 어음만기제한의 필요성 검토
- 외국 입법례 연구
- 어음만기제한의 입법방식 검토
- 목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론 II. 어음의 발행 및 수취 현황 분석 III. 어음만기제한의 필요성 검토 IV. 외국의 입법례 연구 V. 어음만기제한의 입법방식 VI. 결론
--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 및 외국 문헌 조사·분석
-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비교법제연구

- 주요 외국 입법내용 조사 및 분석

전문가 면담·전문가 회의 또는 워크숍·세미나 등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한 설문조사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정책수요처(정부, 기관 등)
법무부, 금융위, 공정위 등
- 국정과제 관련성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국정목표	전략	코드	명
1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1-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2	1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3-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3	1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1-5-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어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유관부처 및 기관의 정책 수립에 참고, 법안 제안 및 법령 개정시 입법자료로 반영
- 기타 기대효과

연구기간

연구년차	(1/1년차)	연구기간	6	개월	시작일		종료일	
------	---------	------	---	----	-----	--	-----	--

기타참고사항(관련근거 등)